

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

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

2019. 1. 23.

금융위원회
금융감독원

법규상 인가심사기준

1.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
2.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
3. 사업계획
 - ① 수익전망의 타당성 · 실현 가능성
 - ② 경영지도기준 충족 가능성
 - ③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
 - ④ 은행 이용자 보호의 적정성
4.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
5.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물적시설
 - ① 은행업 전문인력 · 전산인력 확보
 - ② 전산설비, 통신설비, 보안설비 구축
 - ③ 정전 · 화재 등 사고시 업무연속성 유지설비 구축

추가 고려요소

6. 예측수준 초과 자금 필요시 자본조달방안
7. 주주구성이 금융·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 기여
8. 사업계획의 특성
 - ① 혁신성
 - ② 포용성
 - ③ 안정성
 - ④ 경쟁촉진 · 금융발전
 - ⑤ 해외진출

기준1.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

세부 심사항목

기준1 - ①

최소 자본금 요건 준수 : 250억원 이상 [유지요건]

기준1 - ②

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방안의 적절성 · 현실성

기준1 - ③

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적정성

: 유동성 공급 확약서,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주주들의 자금조달 의지 및 법적 구속력 여부 등을 평가

세부 심사항목

기준2 - ①

주주 구성계획이 법규에 적합할 것

-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또는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·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·주요주주·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
※ 다만, 법원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,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

기준2.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

기준2 - ②

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

2-②-가. 대주주 주식 보유한도

동일인 구분	금융위 승인 없이 보유 가능한 주식한도	금융위 승인시 보유 가능한 주식한도
금융주력자	10%	100%
비금융주력자	10%	34%

※ 주의사항

- 1) 지분율은 **동일인**(본인 및 특수관계인)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합으로 계산
- 2) 10%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인가신청과 동시에 **한도초과보유 승인** 신청도 병행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 (**자격요건** 충족 필요)
- 3) 지분율 4%~10% 구간에 해당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인 경우 **별도의 자격요건** 적용

<참고>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개념

- (동일인)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(본인) 및 특수관계인*을 포함

* 본인이 30%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다 주식소유자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,
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, 합의·계약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 등

- (비금융주력자) 동일인(특수관계인 포함) 소속 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규모가
아래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

- ① 자본 비중이 25% 이상 또는
- ②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

- (비금융회사) 다음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

-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「금융 및 보험업」(비금융지주회사 제외)
- ②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·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
- ③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관리
- ④ 그 밖에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(신용정보업 등)

※ 산업자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주의사항

- 합의·계약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경우 합의·계약의 당사자들은
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(컨소시엄 전체 주식보유비율 34%로 제한)

기준2.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

2-②-나.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을 10% 초과 주주의 자격요건

공통요건

-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
-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채무 미변제자로 등록된 자, 회생절차진행기업,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
-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,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
-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, 공정거래법,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

개별요건 (금융주력자)

-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제한을 준수할 것(자기자본 25% 이내)

개별요건 (비금융주력자)

- 대주주 신용공여 원칙적 금지
-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닐 것(정보통신업 주력기업 제외)
- 최근 5년간 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

<참고> 정보통신업 영위 여부 판단기준

-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 결정방법 등을 참고
: 국세청 제출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영위업종 확인

정보통신업 인정

- (582)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- (591) 영화, 비디오물,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
- (592)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
- (612) 전기 통신업
- (620)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- (631)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
- (639) 기타 정보 서비스업

정보통신업 不인정

- (581)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- (601) 라디오 방송업
- (602) 텔레비전 방송업
- (611) 공영 우편업
- (6391) 뉴스 제공업

- 정보통신업 주력 그룹 판단기준

: (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/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) \geq 50%

2-②-다. 지분을 4~10%로서 최대주주 등인 경우 자격요건

- (금융회사)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
- (비금융회사) 부채비율이 200% 이하일 것
-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, 해당 기업집단(비금융회사 한정)의 부채비율이 200% 이하일 것
- 주식취득자금의 차입금이 아닌 자금(최근 1년 내 유상증자, 보유자산 처분, 보유 현금 등)이고,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

세부 심사항목

기준3 - ①

수익모델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

구 분	평가 기준
사업계획 추정 객관성 및 타당성	· 추정의 바탕이 된 자료가 공신력이 있는지 여부
	· 시장규모, 시장점유율, 수수료 등이 자료를 통해 적절히 추정된 것인지 여부
	· 시설투자, 인력충원, 마케팅 등 초기투자비용이 적정히 고려되어 있는지 여부
사업계획 반영	· 사업계획상 중요한 수익모델이 추정재무제표 작성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여부
영업손익 등	· 영업수익 산출방식이 수익모델을 반영하기에 적절한지 여부
	· 영업비용은 고정비·변동비 등으로 구분되고 영업수익 증감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여부
	·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여부
	· 투자관련 수익과 비용은 사업계획상 투자계획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지 여부
	· 재무관련 수익·비용은 사업계획상 자금조달계획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는지 여부
동종업계 비교	· 추정재무제표상 항목 중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항목은 없는지 여부
	· 수익모델별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이 동종업계와 비교시 적절한지 여부

기준3. 사업계획

기준3 - ②

경영지도기준 준수

구 분	내 용
경영지도 비율 준수 (바젤Ⅲ 기준)	· 사업계획상 예상 보통주자본비율,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지 여부
	· 예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이 규제비율(3%)을 상회하는지 여부
	· 예상 원화예대율이 규제비율(100%)을 하회하는지 여부(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경우)
	· 예상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규제비율(100%)을 상회하는지 여부
	· 예상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규제비율(100%)을 상회하는지 여부
적기시정 조치기준을 상회	· 사업계획상 예상되는 간이 계량평가의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인지 여부
	· 예상되는 간이 계량평가의 자본적정성등급이 3등급 이상인지 여부
	· 예상되는 간이 계량평가의 자산건전성등급이 3등급 이상인지 여부
기타 경영지도기준 준수	· 대출채권 등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이 적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
	·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적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
	· 업무 관련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제공 및 수령시 준수사항을 적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
적정한 유동성 확보	·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객의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주주가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는 등 유사시 적정한 유동성 확보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여부

기준3 - ③

리스크관리의 적정성

3-③-가.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계획의 적정성 등

- 리스크 관리 및 내부자본적정성 평가·관리 체제 구축
- 리스크 부담한도·거래한도 등 설정·운영
- 신용·운영·시장·금리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의 종류별 평가 및 관리
-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 등과 연결한 종합적 인식·감시

3-③-나. 위험관리기준 포함사항

- 위험관리 기본방침
- 자산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, 인식, 측정 및 관리
-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
- 적정투자한도,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등

기준3 - ④

경영지배구조 등의 적정성

3-④-가.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

☞ (예비인가) 이사회 구성 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

- ①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고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
- ②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구(임원후보추천위원회) 설치
- ③ 사외이사는 임원 자격요건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필요
- ④ 이사회의 역할 - 경영목표 및 평가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

☞ (본인가) 정관, 이사회 규정,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내규 확인

3-④-나.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적정성

☞ (예비인가)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

- ① 사외이사가 2/3 이상이고,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
- ② 감사위원 선임시 3%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준수 여부

☞ (본인가) 정관, 이사회 규정, 감사위원회 규정 등 관련 내규 확인

기준3 - ⑤

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여부

3-⑤-가.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을 것

- 임직원의 법규준수,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독·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것
- 내부통제기준*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할 것

*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, 임직원 업무수행시 준수절차, 이사회·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수행 역할, 임직원의 금융 관련법령 위반행위 방지 절차 및 기준 등

3-⑤-나.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,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

☞ 심사방법

- (예비인가)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부통제계획으로 심사
- (본인가)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부통제기준, 이사회 규정, 준법감시규정 등 확인

기준3 - ⑥

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

가. 고유·부수·겸영업무 이외의 인가받지 않은 업무는 영위 불가능

- 인가요건(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감안 : 점포 30개 이상 등 요건 적용 제외) 충족시 신용카드업 겸영 가능

나.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(소상공인·자영업자·중소기업 신용공여는 허용)

다. 법규에 부합한 업무방법서(업무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) 제출

- 적정한 실명확인방안 채택 필요
- 은행의 대고객채널·고객인증방법의 안전성, 편의성, 보안성 등 보장

라. 대면영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

- 장애인·노인 편익 증진,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·기술적 사유 발생(기기 분실·고장 등)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
마.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

-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,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*

* 기업간 합병,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허용

기준3 - ⑥

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

바. 본질적 업무* 이외의 업무는 위탁 허용

- * ① 예금계약 체결, 채무부담 증명, 대출심사 및 승인, 대출실행 등의 금융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
② 준법감시,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법령에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업무
③ 수신 관련 모집업무와 같이 금융회사의 건전성·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 문란,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

- 위탁 가능 업무(정보처리 포함) 중 금융업과 관련 있는 업무는 금감원 사전·사후보고 대상
- 위탁계약서에 수탁회사의 감독·검사 수용의무 및 이용자 피해 관련 책임관계 등을 명시할 것

<참고> 계좌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

금융위 유권해석('15.12월)

구 분	내 용
이중확인 (필수)	① (신분증 사본 제출) 신분증 사진촬영·스캔 후 컴퓨터·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, 파일 업로드 등 방식으로 제출
	② (영상통화)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
	③ (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)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접근매체(통장, 카드 등)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
	④ (기존 계좌 활용) 타 금융회사 개설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으로 확인
	⑤ (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) 생체정보(지문, 얼굴, 홍채 등) 등으로 확인
다중확인 (권고)	⑥ (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)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정보를 활용
	⑦ (다수의 개인정보 검증) 고객 제공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 보유 정보 대조

☞ 구체적 적용방안

- (이중확인) ①~⑤ 중 2가지 이상 중첩 적용(의무사항)
- (다중확인) 이미 선택한 2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①~⑦ 중 추가확인(권고사항)

기준3 - ⑦

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

- 가.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및 전담조직을 두고,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준칙을 두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추 필요
- 나. 전산사고 등으로 고객에 피해발생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

<참고>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의 책임

- 접근매체의 위·변조 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전자적 전송, 처리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 부담
- 다만,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(\$9)

기준3 - ⑧

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[외부평가위원회 중점 평가사항]

구 분	내 용
혁신성	· 차별화된 금융기법,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
	·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
포용성	· 서민금융 지원,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·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
안정성	·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
경쟁 촉진 금융 발전	· 기존 은행산업,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한지 여부
	·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,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
해외 진출	·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실천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

기준3 - ⑨

리스크 관리계획

사업계획에 따른 리스크 관리 계획 점검

가. 대주주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리스크("사업리스크") 차단 방안

- 대주주의 영업악화 등 다양한 사업리스크를 상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

나. 대체전략의 마련

- 특화전략 사용시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

다. 유동성위기 관리 계획

- 비대면 거래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이탈 속도 등에 상응하는 유동성위기 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

기준3 - ⑩

기 타

- 가.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
- 나.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·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

기준4.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

세부 심사항목

발기인 및 임원이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

구 분	요 건	내 용
임원 공통	결격 요건	·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·면제일부터 5년 미경과자
		·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 선고 후 집행 종료·면제일부터 5년 미경과자
		·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·허가 등 취소, 금산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·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(직접적 책임자 등 한정)으로 조치일부터 5년 미경과자
		·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 받은 후 일정기간(조치별 3~5년) 미경과자
		· 해당 은행·자회사 등 여신거래기업과 특수관계 등 특정거래기업 이익대변 우려자
사외 이사	결격 요건	· 최대주주·대주주·특수관계인, 해당 은행(계열사 포함)의 상근 임직원·비상임이사 등
		· 해당 은행과 중요거래관계, 사업상 경쟁·협력관계 법인*의 상근 임직원 등 * 해당 은행과 기술제휴계약·법률자문 등 계약체결법인 등
		· 해당 은행 지분증권 1% 이상 보유자, 자문용역 제공 회계사·변호사·세무사 등
	적극 요건	· 금융, 경영, 법률, 회계, 소비자보호,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 관련분야에서 연구·조사·근무 경력자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·실무경험이 풍부한 자

기준4.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

구 분	요 건	내 용
준법 감시인	결격 요건	·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문책경고·감봉요구 이상 조치 여부
	적극 요건	·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금감원 검사대상기관 10년 이상 근무, 금융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기관·대학에서 5년 이상 종사, 변호사·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종사, 기재부· 금융위·감사원·금감원 등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등

심사방법

-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심사는 예비인가시에는 진행하지 않고 **본인가시에만** 진행할 예정

기준5 - ①

인력보유계획의 적정성

- 가.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것
- 나. 리스크관리, 여신심사, 파생상품, IT* 등 특정부문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이 적정하여야 하며,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등이 적정하여야 함

*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의 5% 이상,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인력의 5% 이상, 정보보호 예산은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% 이상

- 정보보호운영위원회*를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구성·권한이 적정하여야 함

* 중요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

기준5 - ②

영업시설 보유 계획의 적정성

- 가. 사업계획상 영위업무,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충분한 업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
- 나.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을 갖출 것
 - 이해상충부서간 업무공간을 구분하고, 출입을 통제하며, 전산설비가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단방안을 마련해야 함

기준5 - ③

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 등 보유계획의 적정성

가. 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수준의 전산설비를 갖추는 것

나. 전산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추는 것

- (a) 프로그램의 등록, 변경, 폐기 절차를 수립, 운용해야 하며, 암호화 키 관리 및 거래 전문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방법을 제공할 것
- (b)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방안이 적절할 것
- (c) 해킹,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감시운영체제가 적정할 것

다. 백업장치를 구축하는 등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

라. 정전·화재 등 사고 발생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

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절차

예비인가단계 (2개월)

문의사항 및 절차안내

예비인가 신청

‘19.3월중 일괄 접수(예정)

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

예비인가 심사

외부평가위원회 심사
(필요시) 실지조사

예비인가

인가신청

본인가단계 (1개월)

인가심사 및 확인

실지조사

인가

Q&A